함영주, 업무방해 혐의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하나금융그룹 회장〉

대법원, 유죄판단 법리 문제 삼아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가능성 커져
하나금융, 경영 불확실성 해소 국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 회장이 8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장기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로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함 회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서울고법은 이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거슬러 다시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법리 자체를 문제 삼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개인정보 보호 소홀 '티머니' 과징금 5.3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NHN커머스·한국연구재단 등 엄중처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카드 서비스인 티머니가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해킹을 허용하면서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티머니에 대해 과징금 5억3400만 원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공표 명령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 약 12일간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감행했다. 해커는 전 세계 수천 개의 IP 주소를 동원해 총 1226만 차례가 넘는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5만1691명의 회원 계정 로그인에 성공해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으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의 'T마일리지'를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빼돌렸다. 당시 티머니 웹사이트에는 평상시보다 68배나 많은 로그인이 시도되는 등 뚜렷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나, 티머니 측은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티머니 외에도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NHN커머스와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NHN커머스는 10년이 지난 구형 솔루션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주문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2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 역시 10년 넘게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해온 점이 지적되어 7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서현 기자 seoh@

美 기준금리 동결… 파월 "현 수준 적절"

위원 2명 반대… 25bp 인하 주장
성명문 '실업률 안정화' 표현 추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다만 2명의 위원이 0.25%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져, 향후 금리 조정의 시기·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유지(3.50~3.75%)하기로 결정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성명문 문구 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뒷받침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solid)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노동시장에 대해선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이번 성명 변화와 관련해 종전 문구 가운데 "고용시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내용과 "리스크 균형의 이동"을 언급한 대목 등이 삭제됐다고 정리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는 지난해 세 차례 회의에서 75bp 인하돼 중립금리 추정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며 현 수준을 "적절한 기조"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은 사전에 정해진 경로가 아니며 회의 때마다(meeting by meeting) 들어오는 데이터, 전망, 리스크 균형을 바탕으로 추가 조정의 폭과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번 회의와 함께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도 재확인했다. 물가목표를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기준 2%로 유지하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에 고정(anchored)되도록 필요 시 강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12월 기준 PCE 물가상승률이 2.9%, 근원 PCE가 3.0%"라고 제시하면서, 높은 수치가 "관세 영향으로 재화 부문 물가가 자극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동결 자체는 선반영'됐지만, 인하 기대는 일부 후퇴했다. 연방기금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3월 25bp 인하 기대는 전일 14.9%에서 12.9%로 낮아졌고, 상반기·연내 인하폭 전망도 소폭 축소됐다. 다만 발표 직후 가격지표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한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FOMC 결과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 국채금리·주가·달러화가 보합 또는 소폭 상승(미 2년물 0bp, 나스닥 +0.2%, DXY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내 정책당국도 경계 수위를 유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을 거론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키로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김정관 장관, 급거 방미… "입법·투자 등 관세협상 오해 풀 것"

트럼프대통령 관세인상 언급 배경 확인
디지털 규제 관련 해석에는 선 그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미 양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진 급거 방미다.

김 장관은 이튿날인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및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일단 국내 (대미투자) 입법 집행 상황에 불만을 가진 걸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규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들은 항상 있어왔기에 잘 관리하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기선 회장, 모디 인도총리 회동… 조선산업 협력 의지 표명

〈HD현대〉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 참석

정기선 HD현대 회장(**사진**)이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인도 조선산업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HD현대는 28일(현지시간) 정기선 회장과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가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도 에너지 위크 2026(India Energy Week 2026)'의 공식 행사로 모디 총리를 비롯해 인도 관계부처 장관, 국영기업 대표, 글로벌 기업 CEO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육성을 위한 모디 총리의 정책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HD현대가 인도에서 추진 중인 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HD현대는 인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인도는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HD현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참여를 위해 지난해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 코친조선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적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인도 측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하딥 싱 푸리 석유천연가스부 장관과 라자(T.R.B Rajaa)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HD현대 글로벌R&D센터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둘러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